



서울대, 동일본 지진 **2**주기 심포지엄 개최

(서울=뉴스1) 김의진 기자 입력: 2013.03.05 15:37:53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지난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해 '부흥과 위기 : 끝나지 않은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일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엄을 연다.

오는 **11**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소천홀에서 열리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재난 이후 일본의 생활과 사회운동을 다룬 제**1**세션, 지역부흥과 정책 측면을 진단할 제**2**세션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생활과 사회운동'이라는 주제를 놓고 재난 이후 일본에 나타난 생활상의 변화와 이재민 일상 등에 대해 다룬다.

이어질 제**2**세션에서는 **3·11**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의 방재 및 복구 정책이 변화해온 양상과 피해지 부흥 전략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남기정 서울대 인문한국(HK)연구소 교수를 비롯해 일본 호세이대학의 후나바시 하루토시 교수, 독일 일본연구소의 고딕크 마렌 박사 등이 참가한다.

남 교수는 **3·11** 재난 이후 원전국가 일본의 위상이 무너져 내리고 반대로 시민사회의 용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면서 일본에 국가적 대전환의 계기가 형성됐다고 지적할 계획이다.

또 후나바시 교수는 피해지역 이재민이 처한 현실적 문제들을 살피고 재난 복구대책이 일본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한다.

마렌 박사는 주택문제를 조명할 계획으로 특히 커뮤니티 재생, 또는 주민참여 관점에서 피해지역의 고령자 주거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어 제**2**세션에는 일본 도호쿠대학의 마스다 사토루 교수, 조아라 HK연구소 교수, 이강원 서울대 박사 등이 참여한다.

마스다 교수는 대지진 이후 **2**년간 일본 사회정책 동향과 현지 실태를 분석한다.

또 조 교수는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가 부흥주체를 지자체로 설정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부흥특구와 예산 등을 둘러싼 이슈를 분석할 예정이다.

마지막 발표자인 이 박사는 일본 공동체를 위험관리시스템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현재 일본이 지역 주민 목소리를 정부 재해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사례 등을 소개하고 위험관리체계가 어떤 변화과정을 겪고 있는지 설명할 계획이다.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일상', '사회운동', '정책' 등을 키워드로 재난 후 매 순간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지 주민 일상을 포함해 일본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를 진단하게 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아직도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재해지역 주민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연구소는 지난 2년간 연구원들이 재난지역을 둘러본 뒤 작성한 '현장에서 바라본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연구 결과물도 학술회에 맞춰 출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